

생애주기 맞춤 '복지 365'로 군민행복 실현

보성군이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으로 올 한 해를 채운다. '다시 뛰는 보성 365'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보성군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기초연금 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작년 보건복지분야 6관왕에 빛나는 영광을 안은 바 있다. 올해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간다는 포부다.

군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
김철우 군수, 의견청취



보성군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난 7일 보성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 단위로 열리는 '군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공연과 군정 보고 영상, 주요업무계획 및 정책 방향 등을 전달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이 바라는 보성군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 언제나 지금까지처럼 소통하며 군정을 펼칠 것"이라며 "의견을 토대로 보성군민 모두 잘사는 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겠다. 군민과의 공감, 소통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7일 보성읍·웅치면을 시작으로 8일 득량면·회천면, 9일 미력면·노동면, 10일 겸백면·울어면, 14일 복내면·문덕면, 15일 조성면·별교읍 순으로 12개 읍면 순회 '찾아가는 군민과의 공감 대화'를 갖는다. 김은지 기자

문화복지에 연 11만원 지원 보성군, 문화누리카드 발급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및 발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보성군 지원 대상은 총 3815명이다. 보성군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신규 및 재발급 대상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자동재충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년도 발급자가 올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규 및 재발급 대상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ARS(1544-3412)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다양한 문화생활 경험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가 완화 될 수 있도록 발급·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새로운 시작! 영아기 집중 투자
군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두터운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월 30만원) 대신 부모급여(월 35만원~70만원)를 확대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공보육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추진해온 국공립 초동친구어린이집 신축(하나금융그룹 공모사업 선정) 사업이 이달 착공에 들어가며 올 12월 준공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모델의 도시형 어린이집을 구축해 돌봄 환경을 개선이 기대된다.

●슬기로운 아동 돌봄 체계
아동 돌봄 체계도 변화한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원예교실, 맛있는 요리교실, 가족 힐링캠프,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직업 체험 나들이, 행복한 문화 나들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적립금 5만원 내에서 국가가 월 10만원 내로 1:2 매칭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및 만 12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2006~2011년생)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이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고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여성·청소년에 생기 넘치는 일상을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이음바우치'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취·창업교육 및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8080만원을 투입하여 상품권 및 바우처로 제공한다.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어르신 복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92개 마을에, 찾아가는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과 사랑의 밥차를 3~12월 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올해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군 제공

다시뛰는 보성 365' 슬로건 사각지대 없는 복지600 추진 전년 지역복지평가 등 6관왕 "생애 주기별 촘촘·든든복지"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 동네 웃음주치의가 간다'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활 및 신체활동 등 주간보호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개소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기회 및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기존 2305명에서 2473명으로 168명의 일자리가 증대됐다.

보성군은 군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100명의 일자리 추가로 확보하며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개 소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7개 사업단을 구성해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를 추진 중이다.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도 추진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450여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돌봄 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노후된 경로당 소규모 수선사업, 운동기구 보급 및 안마의자 수리 및 교체, 냉방기(에어컨) 수리 및 교체 등 여가시설을 지원한다.

2021년부터 추진해온 AI 돌봄 로봇 사업을 20대 추가 보급해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 노인 우울증 예방, 자살 방지 등 대면접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불편 최소화 든든한 장애인 복지
올해 14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서 소득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장애인 연금은 작년 대비 5%(25만 8540원~32만3180원), 장애수당은 2만원(4만원 → 6만원) 인상됐다.

재가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만 18세 미만)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문화 계승 보훈대상 예우 강화
군은 2022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이어 올해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사기 진작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연 36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생계곤란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지원은 사망·실직·질병 등 뜻하지 않게 위기 상황에 처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을 부가 지원한다. 그 밖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 연계 등 9종의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3년에는 더 빠르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제5기(2023~2026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인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변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